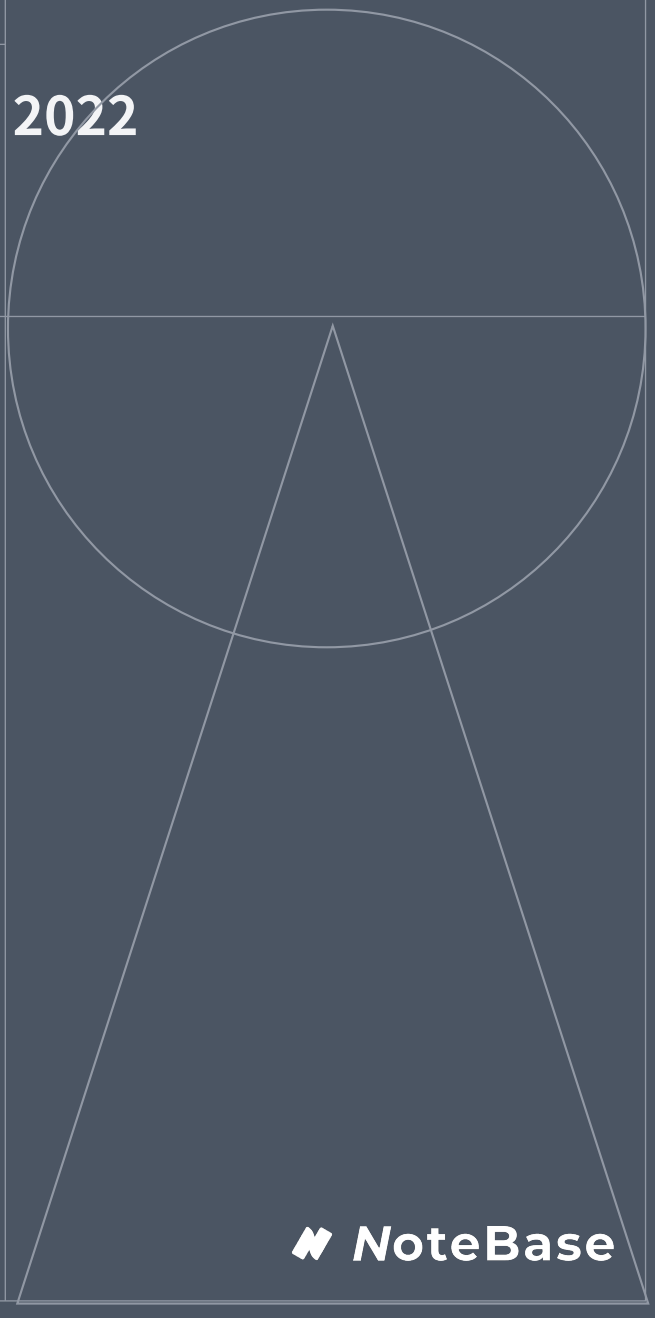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사회 · 2022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사회 · 2022

공무원/국회직/9급 · 사회 · 2022

1. 다음에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람들은 타인과 공적인 장소를 함께 점유해야 하는 경우에 일부러 자는 척하거나, 무표정한 표정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이는 모르는 사람과의 소통을 피하기 위한 나름의 적극적이고 의도된 행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수용하고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거리를 두게 된다. 이렇게 비사회적으로 보이는 행위 역시 사람들이 서로를 의식하고 어떤 상황에 공통된 의미를 둘 때 나타나는 사회적 행위이다.

① 의미의 교환을 통한 공유된 경험의 세계를 강조한다.
② 사회적 행위자의 주체적 능동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③ 사회 구조가 재생산되는 과정을 해석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④ 사회 변동과 사회 발전의 예측을 위한 실증적 연구를 강조한다.
⑤ 사회 제도 등이 연관성을 갖고 기능을 수행하면서 사회가 유지된다고 본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제시된 비관심적 태도를 사람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의미를 공유하고 상황을 구성하는 현상으로 보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개인들이 상징을 사용하여 상호 작용하고, 그 과정에서 부여하고 공유한 의미에 따라 사회·문화 현상이 형성된다고 보는 미시적 관점이다. 인간의 주관적 의미 해석과 능동성을 중시한다.
기능론은 사회 제도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기능하여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한다고 보고, 갈등론은 불평등한 구조와 지배·갈등 및 그 재생산에 주목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사람들이 서로의 행동 의미를 이해하고 공유하여 공통된 경험의 세계를 만든다는 설명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에 부합한다. 제시문에서도 사람들은 타인의 무표정한 태도가 소통을 피하려는 의도임을 함께 이해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사회적 행위자의 주체적 능동성을 간과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행위자가 상황을 해석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주체적 능동성을 강조한다고 해야 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사회 구조가 재생산되는 과정을 해석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이다. 올바르게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일상적 상호 작용에서 의미가 형성되는 과정에 주안점을 두며, 거시적 사회 구조의 재생산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야 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사회 변동과 사회 발전의 예측을 위한 실증적 연구를 강조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사회 변동의 예측보다 일상생활에서 행위자가 부여하는 의미와 상호 작용 과정을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해야 한다.
⑤ X — 틀린 표현은 '사회 제도 등이 연관성을 갖고 기능을 수행하면서 사회가 유지된다'이다. 이는 기능론의 관점이다. 올바르게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개인 간 상호 작용과 의미의 형성을 통해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한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제시문에 '사회적 행위'라는 표현이 있어 거시적 사회 구조에 관한 이론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서로를 의식함', '공통된 의미', '상황에서의 행동'은 개인 간 의미 교환을 중시하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의 핵심 단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황 정의, 상징, 의미 부여, 상호 작용, 주관적 해석이 제시되면 상징적 상호 작용론으로 판단한다. 제도 간 기능과 사회 유지가 중심이면 기능론, 불평등·지배·갈등과 구조 재생산이 중심이면 갈등론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개인의 해석과 의미 교환', 기능론은 '기능과 사회 유지', 갈등론은 '불평등과 갈등'이다.

NoteBase

2. ㉠과 ㉡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 사회학 이론은 대표적으로 ㉠과 ㉡으로 나눌 수 있다. ㉠은 사회 계층을 경제력, 권력, 위신 등 다원적 요인에 의해 구분한다. 이에 비하여 ㉡은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라는 단일 요소로 사회 계층을 범주화한다.

① ㉠은 ㉡보다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② ㉠은 ㉡보다 동일 집단 구성원 간의 귀속 의식을 강조한다.
③ ㉡은 ㉠과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을 미시적으로 조망한다.
④ ㉠은 ㉡과 달리 사회 계층을 불연속적으로 구분된 상태로 본다.
⑤ ㉠은 ㉡보다 사회 불평등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고 본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베버의 다원론적 계층 이론과 마르크스의 일원론적 계급 이론을 비교하여 지위 불일치, 계급 의식, 분석 관점, 계층 구분 방식, 불평등의 원인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은 베버의 다원론적 계층 이론이다. 경제적 계급뿐 아니라 권력과 위신 등 서로 독립적일 수 있는 여러 차원으로 사회 계층을 파악한다. 따라서 한 개인의 여러 차원상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지위 불일치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은 마르크스의 일원론적 계급 이론이다.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을 구분하며, 자본주의의 계급 관계와 구조적 불평등을 강조한다.
핵심 대비는 '베버=경제력·권력·위신의 다차원', '마르크스=생산 수단 소유 여부의 단일 기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은 경제력·권력·위신을 각각 고려하므로 한 차원에서는 높고 다른 차원에서는 낮은 지위 불일치 현상을 ㉡보다 잘 설명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은 ㉡보다 동일 집단 구성원 간의 귀속 의식을 강조한다'이다. 계급 구성원 사이의 공통 이해관계와 계급 의식을 더 강조하는 것은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로 계급을 구분하는 ㉡이다. 올바르게는 '㉡은 ㉠보다 동일 계급 구성원 간의 귀속 의식을 강조한다'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미시적으로 조명한다'이다. ㉠과 ㉡은 모두 개인 간 상호 작용보다 사회 구조와 계층 체계를 중심으로 불평등을 설명하는 거시적 관점이다. 올바르게는 '㉡도 ㉠과 마찬가지로 사회 불평등 현상을 거시적으로 조명한다'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은 사회 계층을 불연속적으로 구분된 상태로 본다'이다.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대립하는 계급을 구분하는 ㉡이 불연속적 구분을 더 뚜렷하게 전제하며, ㉠은 여러 차원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계층적 위치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올바르게는 '㉡은 ㉠보다 사회 계층을 불연속적으로 구분된 상태로 본다'이다.
⑤ X — 틀린 표현은 '㉠은 ㉡보다 사회 불평등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고 본다'이다. 자본주의의 생산 관계와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에서 계급 불평등의 원인을 찾는 것은 ㉡이다. 올바르게는 '㉡은 ㉠보다 사회 불평등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고 본다'이다.

오답 포인트

㉠과 ㉡의 속성을 서로 바꾸어 놓은 표현이 함정이다. 특히 '귀속 의식', '불연속적 계급 구분',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는 생산 수단 소유를 기준으로 대립적 계급 관계를 설명하는 ㉡과 연결되고, '지위 불일치'는 여러 계층 차원을 인정하는 ㉠과 연결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제력·권력·위신처럼 기준이 여러 개이면 베버의 다원론,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처럼 기준이 하나이면 마르크스의 일원론으로 먼저 구분한다. 이후 지위 불일치는 다원론에, 계급 의식·계급 대립·자본주의의 구조적 불평등은 일원론에 대응시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베버는 '여러 차원과 지위 불일치', 마르크스는 '생산 수단과 계급 대립'이다.

NoteBase

3. 갑이 행사할 수 있는 기본권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은 을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구속되어 형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수사 과정에서 을의 살해자가 병이라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자 갑은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

① 국민 주권의 원리를 구체화한다.
② 소극적·포괄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③ '국가로부터의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④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⑤ 기본권 중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구속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형사 보상 청구권을 찾고, 이 권리가 속하는 청구권의 특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형사 보상 청구권은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이 정한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청구권에 속한다. 청구권은 기본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국가에 구제·보호를 요구하여 다른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적 기본권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국민 주권의 원리를 구체화한다'는 참정권의 특징이다. 올바르게는 청구권은 국가에 권리의 보호나 구제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② X — '소극적·포괄적 권리'는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자유권의 특징이다. 올바르게는 청구권은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적극적·개별적 권리이다.
③ X — '국가로부터의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자유권이다. 올바르게는 청구권은 '국가에의 청구'를 통해 기본권의 보호와 구제를 확보한다.
④ O —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구제를 요구할 수 있게 하므로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사례의 갑은 무죄 판결에 따른 형사 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
⑤ X —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는 일반적으로 사회권의 특징이다. 올바르게는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기본권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사례의 핵심은 무죄 판결 자체가 아니라 구금되었던 사람이 국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 주권’, ‘국가로부터의 자유’, ‘현대적 권리’라는 표현을 각각 참정권·자유권·사회권의 특징과 혼동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가에 보상·배상·재판·구제를 요구하는 내용이면 청구권으로 판단한다. 청구권의 공통 기능은 다른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암기 포인트

참정권은 국민 주권,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사회권은 국가에 의한 생활 보장, 청구권은 국가에 구제를 요구하는 기본권 보장의 수단이다.

NoteBase

4. A, B, C 세 나라의 현재 정부 형태가 갖는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그렇다, × : 아니다)

항목	A	B	C
입법부와 행정부의 구성이 독립적인가?	○	×	○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는가?	×	○	○
의회 의원이 행정부 각료를 겸할 수 있는가?	×	○	○
사법부의 독립은 철저히 보장되고 있는가?	○	○	○
의회 내에 과반수 의석을 점유한 정당이 있는가?	○	×	×

<보 기>

ㄱ. A국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낮다.
ㄴ. B국은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정부가 구성될 수 있다.
ㄷ. C국은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혼합형 정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ㄹ. 세 나라 모두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의원의 각료 겸직 가능 여부를 바탕으로 대통령제·의원내각제·혼합형 정부 형태를 구분하고 각 진술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A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히 분리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의원의 각료 겸직이 인정되지 않는 대통령제이다.
B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의원의 각료 겸직이 인정되는 의원 내각제이다. 과반수 의석 정당이 없으면 연립 정부가 구성될 수 있다.
C는 대통령제의 요소와 의원 내각제의 요소가 함께 나타나는 혼합형 정부 형태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의원의 각료 겸직을 허용한다.
ㄱ은 틀리다. 대통령제인 A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되어 상호 견제하므로 양 기관이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할 수 없다.
ㄴ은 옳다. B는 과반수 의석 정당이 없으므로 여러 정당이 참여하는 연립 정부가 구성될 수 있고, 이 경우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ㄷ은 옳다. C는 대통령제의 권력 분립 요소와 의원 내각제의 정부 법률안 제출권·의원 각료 겸직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ㄹ은 틀리다. 표가 공통으로 보여 주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이지 모든 법 집행 기관의 자율성 보장이 아니다. 특히 B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된 형태이다. 올바르게는 '세 나라 모두 사법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ㄴ은 옳지만 ㄱ은 틀리다. A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되어 상호 견제하므로 두 기관의 충돌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볼 수 없다. 'ㄱ, ㄴ'은 'ㄴ, ㄷ'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ㄷ은 옳지만 ㄱ은 틀리다. C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요소가 결합된 형태이지만, A의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는 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 'ㄱ, ㄷ'은 'ㄴ, ㄷ'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 ㄴ과 ㄷ이 모두 옳다. B에서는 과반수 정당이 없어 연립 정부가 구성될 수 있고, C에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요소가 함께 나타난다.
④ X —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표에서 세 나라에 공통으로 보장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이며, 법 집행 기관 전체의 자율성이 아니다. 'ㄴ, ㄹ'은 'ㄴ, ㄷ'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C가 혼합형 정부 형태라는 판단은 맞지만, 세 나라가 모두 법 집행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결론은 표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ㄷ, ㄹ'은 'ㄴ, ㄷ'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ㄱ에서는 권력 분립을 곧 충돌 가능성의 감소로 오해하기 쉽다. 대통령제의 엄격한 분립은 상호 견제를 가능하게 하지만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립도 낳을 수 있다. ㄹ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더 넓은 표현인 '법 집행 기관의 자율성'으로 바꾼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입법부·행정부 독립,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없음, 의원의 각료 겸직 불가가 함께 나타나면 대통령제로 판단한다. 입법부·행정부 융합,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의원의 각료 겸직이 함께 나타나면 의원 내각제로 판단한다. 두 유형의 특징이 섞여 있으면 혼합형 정부 형태로 판단한 뒤, 표에 제시된 표현보다 범위를 넓힌 추론이 있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대통령제는 엄격한 분립, 의원 내각제는 권력 융합, 혼합형은 두 제도의 요소가 결합된 형태이다.

NoteBase

5. A국에서 제정한 법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 최근 A국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제곱미터당 1,000만 원에 형성되면서 급격히 상승하자 기존 아파트 시세도 덩달아 상승하였고, 국민들의 주택 구입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A국은 아파트 분양가가 제곱미터당 8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법을 제정하였다.

①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② 주택 공급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③ 주택 시장에서 생산자 잉여가 증가할 것이다.
④ 주택 시장에서 초과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다.
⑤ 최저 가격 제도에 해당하는 가격 통제 정책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된 가격상한제가 주택 시장의 수요·공급과 잉여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시장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최고가격을 정하는 제도이다. 상한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낮으면 실제로 가격을 제한하며, 수요량은 늘고 공급량은 줄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가격하한제는 시장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최저가격을 정하는 제도이다.
이 사례에서는 균형가격이 제곱미터당 1,000만 원인데 상한가격을 800만 원으로 정했으므로 가격상한제가 실효성을 가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이다. 균형가격보다 낮은 가격상한은 공급자의 공급 유인을 약화하고 주택 부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올바르게는 주택 시장의 거래와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해야 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주택 공급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이다. 가격상한제는 높은 가격으로부터 주택 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올바르게는 주택 수요자의 가격 부담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야 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생산자 잉여가 증가할 것이다'이다. 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낮아지고 거래량도 감소하므로 생산자 잉여는 감소한다. 올바르게는 생산자 잉여가 감소할 것이라고 해야 한다.
④ O — 상한가격 800만 원은 균형가격 1,000만 원보다 낮다. 이 가격에서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져 주택 시장에 초과 수요, 즉 주택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⑤ X — 틀린 표현은 '최저 가격 제도'이다. 일정 가격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는 최고가격을 정하는 가격상한제이므로, 올바르게는 최고 가격 제도에 해당한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가격을 낮추면 거래가 활발해진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①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균형가격보다 낮은 상한가격에서는 수요량 증가와 공급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다. 또한 ⑤의 '최저 가격'은 가격하한제의 표현이며, 이 사례처럼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격상한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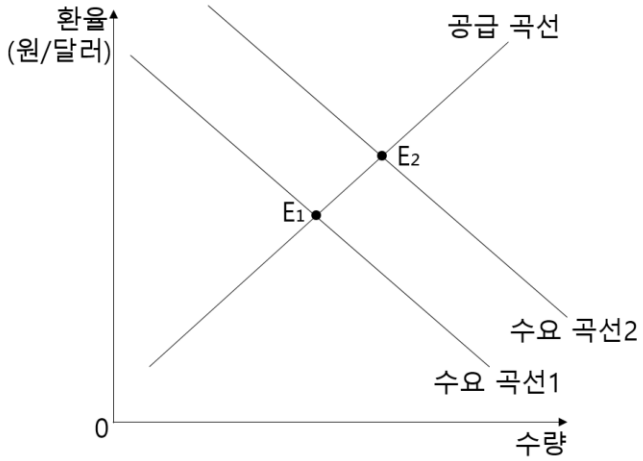
먼저 통제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낮은지 확인한다. 균형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이면 실효성 있는 가격상한제이며, 수요량 증가·공급량 감소·초과 수요 발생·생산자 잉여 감소의 방향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균형가격 아래의 가격상한제는 최고가격을 제한하고 초과 수요를 만든다.

NoteBase

6. 외환 시장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균형점이 E_1에서 E_2로 이동할 수 있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① 해외 경기 침체
② 국내 물가 하락
③ 국내 이자율 상승
④ 외국 상품의 선호 증가
⑤ 외국인의 국내 투자 확대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외환 시장에서 외화 수요가 증가할 때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균형 환율과 외화 거래량이 함께 증가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세로축은 원/달러 환율, 가로축은 외화의 수량임을 확인한다.
2. 공급곡선은 그대로이고 수요곡선이 수요곡선1에서 수요곡선2로 오른쪽 이동했음을 확인한다.
3. 외화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선지에서 찾는다.

핵심 근거

그래프에서 공급곡선은 변하지 않은 채 외화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균형점이 E_1에서 E_2로 이동하여 원/달러 환율과 외화 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 외국 상품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면 수입이 늘고, 수입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달러 수요도 증가하므로 이 이동과 일치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해외 경기 침체는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해외 수요와 수출을 감소시켜 외화 공급을 줄이는 요인이다. '외화 수요 증가'가 아니라 '외화 공급 감소'로 고쳐야 한다.
② X — 국내 물가가 하락하면 외국 상품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수입과 외화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외화 수요 증가'가 아니라 '외화 수요 감소'로 고쳐야 한다.
③ X — 국내 이자율 상승은 외국 자금의 국내 유입을 늘려 외화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외화 수요 증가'가 아니라 '외화 공급 증가'로 고쳐야 한다.
④ O — 외국 상품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면 수입이 늘고, 수입 결제에 필요한 달러의 수요가 증가한다. 따라서 수요곡선이 수요곡선1에서 수요곡선2로 오른쪽 이동한다.
⑤ X —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확대되면 외국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외화 공급이 증가한다. '외화 수요 증가'가 아니라 '외화 공급 증가'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E_1에서 E_2로 이동하면서 환율이 상승했다는 결과만 보고 모든 환율 상승 요인을 고르면 안 된다. 이 그림은 공급곡선이 고정되고 수요곡선만 오른쪽으로 이동한 경우이므로, 외화 공급 감소가 아니라 외화 수요 증가 요인을 찾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화가 필요한 거래는 외화 수요, 외화가 국내로 들어오는 거래는 외화 공급으로 구분한다.
수입·해외여행·해외투자의 증가는 외화 수요를 늘리고, 수출·외국인의 국내 투자의 증가는 외화 공급을 늘린다.

암기 포인트

수입 증가 → 달러 수요 증가 → 원/달러 환율 상승이다.

NoteBase

7. 「대한민국헌법」 조문의 일부이다. 이에 나타난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① 국민 투표
② 권력 분립
③ 민주적 선거 제도
④ 국민의 참정권 보장
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민주 공화국 원리와 국민 주권 원리를 실현하는 장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국민이 국가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장치와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는 장치를 구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국민 주권 =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원리이다.
권력 분립 =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에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는 원리이다.

핵심 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이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국민 투표, 민주적 선거, 참정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의사가 국가 의사 형성에 반영되도록 하므로 이 원리를 실현하는 장치이다. 반면 권력 분립의 직접적인 목적은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국민 투표는 국민이 중요한 국가 의사를 직접 결정하는 직접 민주 정치의 장치이므로 국민 주권을 실현한다.
② X — 권력 분립은 입법·행정·사법 권력을 나누고 상호 견제하게 하여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이다. 제1조에 나타난 국민 주권을 국민의 정치 참여로 직접 실현하는 장치로 분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틀린 표현: 국민 주권 실현 장치로서의 '권력 분립' → 올바른 표현: 권력 분립은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이다.
③ O — 민주적 선거 제도는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가 의사 형성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 민주 정치의 장치이므로 국민 주권을 실현한다.
④ O — 국민의 참정권 보장은 국민이 선거와 공무 담임 등 정치 과정에 참여하게 하므로 국민 주권을 실현한다.
⑤ O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국민이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고 표현하며 집단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하므로 민주 정치와 국민 주권의 실현에 필요한 기반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권력 분립도 민주 국가의 중요한 원리이므로 국민 주권의 직접적 실현 장치라고 착각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국민의 의사를 국가 의사에 반영하는가'와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는가'를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민 주권의 실현 장치를 묻는 경우 국민이 직접 결정하거나 대표자를 선출하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반영하는 제도인지 먼저 판단한다. 국가 기관 사이에 권한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는 제도라면 권력 분립의 장치로 분류한다.

암기 포인트

국민 주권은 참여와 의사 반영, 권력 분립은 분산과 상호 견제이다.

NoteBase

8. 어느 법률 조문의 일부이다. 밑줄 친 근로조건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②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근로 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④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의 사유와 그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5번

쟁점

이 문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지급, 근로시간과 휴게, 해고의 서면 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각 제도의 원칙과 법정 기간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이나 금전보상 등의 구제를 구하는 절차이다.

핵심 구분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통화·직접·전액 지급 원칙, 1일 8시간·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8시간 근로 시 근로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를 정한다.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옳다.

② O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옳다. 다만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 등 예외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③ O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사용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옳다. 휴게시간 자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O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옳다. 이러한 서면 통지가 있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

⑤ X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기간을 6개월로 제시한 부분이 틀렸다.
틀린 표현: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올바른 표현: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⑤의 '6개월'을 다른 노동관계상 기간과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구제신청 기간이 정답을 가른다. 또한 ②의 1일 8시간·1주 40시간은 예외 없는 절대 기준이 아니라 법정근로시간의 원칙이라는 점을 구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근로조건 문항에서는 임금은 통화·직접·전액 지급, 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 40시간, 8시간 근로의 휴게는 1시간 이상, 해고는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라는 기준을 차례로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이다.

NoteBase

9. 자본주의의 형태별 등장 배경과 그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본주의의 형태	(가)	(나)	(다)
등장 배경	세계 대공황	1차 산업 혁명	1차, 2차 석유 파동
특징	ㆍ정부 지출 확대 ㆍ복지 국가 추구	ㆍ시장의 자율성 최대 보장 ㆍ야경 국가 추구	ㆍ규제 완화 ㆍ복지 지출 삭감

① 자본주의는 (가)→(나)→(다)의 순서로 변천해 왔다.
② (나)에서는 형평성의 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였다.
③ (다)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부정하였다.
④ 사익 추구를 제한하는 경우는 (나)보다 (가)에서 많았다.
⑤ 정부의 개입 정도는 (다)보다 (나)에서 강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수정 자본주의, 고전적 자유방임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등장 순서와 정부 개입 정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나)는 산업 혁명기에 형성된 고전적 자유방임 자본주의로, 시장의 자율성과 사유 재산권을 중시하고 정부 역할을 최소화한다.
(가)는 세계 대공황 뒤 등장한 수정 자본주의로,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지출과 복지 정책 등 적극적 정부 개입을 강조한다.
(다)는 석유 파동과 복지 국가의 비효율에 대한 비판 속에서 등장한 신자유주의로, 규제 완화와 복지 지출 축소를 통해 시장 기능을 확대한다.
등장 순서는 (나) → (가) → (다)이며, 정부 개입은 (나)보다 (다)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고 세 형태 가운데 (가)에서 가장 강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가)→(나)→(다)'가 틀린 순서이다. 실제 등장 순서는 산업 혁명기의 (나)에서 세계 대공황 이후의 (가)를 거쳐 석유 파동 이후의 (다)로 이어진다.
② X — (나)가 형평성의 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했다는 부분이 틀리다. (나)는 시장의 자유와 사익 추구를 중시했으며, 형평성과 복지는 (가)가 상대적으로 강조했다.
③ X — (다)가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부정했다는 부분이 틀리다. (다)는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을 중시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입장이다.
④ O — 사익 추구를 제한하는 정부 규제와 개입은 자유방임을 중시한 (나)보다 수정 자본주의인 (가)에서 더 많았다.
⑤ X — 정부 개입이 (다)보다 (나)에서 강했다는 부분이 틀리다. 정부 개입은 고전적 자유방임 자본주의인 (나)보다 신자유주의인 (다)에서 상대적으로 강하다.

오답 포인트

표의 열 순서가 역사적 등장 순서와 같다고 생각하면 ①에 속기 쉽다. 또한 (다)는 정부 개입을 줄이지만 시장 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을 강화하려 한다는 점이 ③의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산업 혁명·자유방임'은 (나), '대공황·정부 지출·복지'는 (가), '석유 파동·규제 완화·복지 축소'는 (다)로 연결한다. 그다음 역사적 순서와 정부 개입 정도를 각각 따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자유방임 (나) → 대공황 뒤 정부 개입 (가) → 석유 파동 뒤 시장 강화 (다)이다.

NoteBase

10. 밑줄 친 현상으로 인해 나타날 결과로 옳은 것은?
(단, X재와 Y재 모두 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른다)

> X재와 Y재는 보완재이다. 두 재화 모두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이 상황에서 X재의 생산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① X재 공급자의 총수입은 증가한다.
② Y재 공급자의 총수입은 증가한다.
③ X재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④ Y재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⑤ X재 공급이 감소하고 Y재 수요가 증가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생산비 증가에 따른 공급 감소가 해당 재화의 가격·거래량·공급자 총수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변화가 보완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급 감소: 생산비가 증가하면 같은 가격에서 공급하려는 수량이 줄어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며,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비탄력적 수요: 가격 상승률이 수요량 감소율보다 커지므로 공급자의 총수입은 증가한다.
보완재: 함께 소비하는 두 재화 중 한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감소한다. 따라서 X재 가격이 상승하면 Y재 수요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고, Y재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모두 감소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X재의 생산비 증가로 공급이 감소하면 X재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X재 수요가 비탄력적이므로 가격 상승의 효과가 거래량 감소의 효과보다 커서 X재 공급자의 총수입은 증가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Y재 공급자의 총수입은 증가한다'이다. X재 가격 상승으로 보완재인 Y재의 수요가 감소하면 Y재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감소하므로, 올바르게는 Y재 공급자의 총수입은 감소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X재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이다. 생산비 증가로 X재 공급이 감소하므로, 올바르게는 X재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Y재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이다. X재 가격 상승은 보완재인 Y재의 수요를 감소시키므로, 올바르게는 Y재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감소한다.
⑤ X — 틀린 표현은 'Y재 수요가 증가한다'이다. X재 공급은 감소하지만 X재 가격이 상승하면 보완재인 Y재를 찾는 수요도 줄어드므로, 올바르게는 X재 공급이 감소하고 Y재 수요도 감소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생산비 증가는 X재의 수요가 아니라 공급을 감소시키며, 보완재 관계에서는 X재 가격 상승이 Y재 수요 증가가 아니라 감소를 일으킨다. 또한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에는 가격 상승으로 판매량이 줄어도 총수입은 증가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생산비 증가를 공급곡선의 왼쪽 이동으로 처리하여 X재의 가격 상승과 거래량 감소를 판단한다. 다음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이용해 X재 총수입의 방향을 정한다. 마지막으로 보완재 관계를 적용하여 X재 가격 상승이 Y재 수요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Y재의 가격과 거래량도 감소한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생산비 상승 → 공급 감소 → 가격 상승·거래량 감소, 비탄력적 수요에서 가격 상승 → 총수입 증가, 보완재 한쪽 가격 상승 → 다른 쪽 수요 감소이다.

NoteBase

11.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은 "㉠상품 홍보 영상물에 대한 높은 접촉 빈도가 상품 구매 욕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갑은 먼저 ㉢연구 대상자 500명을 선정하여 무작위로 각각 250명씩 A, B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A집단에게는 일정 기간 상품 홍보 영상물을 빈도 높게 노출시키고, B집단에게는 동일 기간 동안 상품 홍보 영상물을 거의 노출시키지 않았다. 이후에 두 집단에게 ㉤상품 구매 욕구를 해당 상품 구매를 위하여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보고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① ㉠는 종속 변수이다.
② ㉡에서 연구자의 주관은 배제되어야 한다.
③ ㉢는 모집단이다.
④ ㉣는 통제 집단이다.
⑤ ㉤는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양적 연구에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연구 주제 선정의 가치 개입, 모집단과 표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조작적 정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독립 변수는 연구자가 원인으로 보고 조작하거나 변화시키는 변수이고, 종속 변수는 그에 따라 변하는 결과 변수이다.
모집단은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려는 전체 대상이며, 표본은 모집단에서 실제 조사 대상으로 뽑은 일부이다.
실험 집단은 독립 변수의 처치를 받는 집단이고, 통제 집단은 처치를 받지 않아 비교 기준이 되는 집단이다.
조작적 정의는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로 관찰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로 바꾸어 정의하는 것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의 상품 홍보 영상물에 대한 높은 접촉 빈도는 상품 구매 욕구에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설정된 독립 변수이다. 틀린 표현은 '종속 변수'이며, 올바르게는 '독립 변수'이다. 종속 변수는 상품 구매 욕구이다.
② X — ㉡의 연구 주제 선정 단계에서는 무엇을 연구할 것인지 정하는 과정에 연구자의 관심이나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틀린 표현은 '연구자의 주관은 배제되어야 한다'이며, 올바르게는 '연구 주제 선정에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 있으나 자료 수집과 분석에서는 객관성을 지켜야 한다'이다.
③ X — ㉢의 연구 대상자 500명은 실제 연구를 위해 전체 대상 중에서 뽑은 표본이다. 틀린 표현은 '모집단'이며, 올바르게는 '표본'이다.
④ X — ㉣의 A집단은 상품 홍보 영상물에 빈도 높게 노출되는 처치를 받으므로 실험 집단이다. 틀린 표현은 '통제 집단'이며, 올바르게는 '실험 집단'이다. 영상물에 거의 노출되지 않은 B집단이 통제 집단이다.
⑤ O — ㉤은 추상적인 '상품 구매 욕구'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해당 상품 구매를 위하여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구체화했으므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A집단과 B집단의 명칭만 보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혼동하거나, 연구 대상자 500명을 모집단으로 착각하기 쉽다. 또한 연구 주제 선정 단계의 가치 개입 가능성과 연구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객관성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원인으로 처치한 변수를 독립 변수, 그 결과를 종속 변수로 구분한다. 처치를 받은 집단은 실험 집단, 받지 않은 집단은 통제 집단으로 판단한다. 추상적 개념을 금액·점수·횟수처럼 측정 가능한 지표로 바꾸었다면 조작적 정의이다.

암기 포인트

원인은 독립 변수, 결과는 종속 변수, 처치받으면 실험 집단, 실제로 뽑히면 표본, 측정 가능하게 바꾸면 조작적 정의이다.

NoteBase

12. 소속감을 기준으로 사회 집단을 구분한 것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개인이 소속되어 있으며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 집단
(나) 개인이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집단

① (가)는 다른 집단과의 경쟁을 통해 전체 사회 발전과 통합에 기여한다.
② (가)와 준거 집단이 일치하면 (가)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진다.
③ (나)는 특정 목적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이다.
④ (가)와 (나)의 경계와 범위는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다.
⑤ (가)는 공동 사회(공동체), (나)는 이익 사회(결사체)라고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속 여부와 소속감의 유무에 따라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고, 내집단과 준거 집단의 관계를 이해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내집단: 자신이 소속되어 있으면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집단이다.
외집단: 자신이 소속되어 있지 않고 소속감도 느끼지 못하는 집단이다.
준거 집단: 개인이 가치 판단이나 행동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집단이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 준거 집단과 일치하면 그 집단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다.
(가)는 내집단이고, (나)는 외집단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다른 집단과의 경쟁을 통해 전체 사회 발전과 통합에 기여한다'이다. 내집단 의식은 구성원 사이의 협동과 결속을 높일 수 있지만, 외집단에 대한 배타성이나 적대감을 강화하여 집단 간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올바르게는 '(가)는 구성원 간 협동과 결속을 높일 수 있으나, 지나치면 외집단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이다.
② O — (가)는 내집단이다. 자신이 소속된 내집단과 판단·행동의 기준이 되는 준거 집단이 일치하면 현재 소속 집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므로 만족감이 높아진다.
③ X — 틀린 표현은 '특정 목적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이다. 이는 결합 의지에 따라 구분한 이익 사회의 특징이지, 소속감 유무에 따라 구분한 외집단의 특징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나)는 개인이 소속되어 있지 않고 소속감도 느끼지 못하는 외집단이다'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경계와 범위는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다'이다. 내집단과 외집단은 개인의 소속과 소속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해지므로 개인이나 상황이 달라지면 그 구분도 바뀔 수 있다. 올바르게는 '(가)와 (나)의 경계와 범위는 개인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다.
⑤ X — 틀린 표현은 '(가)는 공동 사회, (나)는 이익 사회'이다. 공동 사회와 이익 사회는 결합 의지에 따른 분류이고, (가)와 (나)는 소속감에 따른 분류이다. 올바르게는 '(가)는 내집단, (나)는 외집단'이다.

오답 포인트

③과 ⑤는 사회 집단을 나누는 서로 다른 기준을 섞은 선지이다. '소속감'이 기준이면 내집단·외집단이고, '결합 의지'가 기준이면 공동 사회·이익 사회이다. 또한 ①처럼 내집단의 결속 기능을 곧바로 전체 사회의 통합 기능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분류 기준을 확인한다. 소속되어 있고 소속감을 느끼면 내집단, 소속되어 있지 않고 소속감도 없으면 외집단이다. 그다음 실제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소속 집단에 대한 만족도의 방향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소속감이 있으면 내집단, 없으면 외집단이며, 내집단과 준거 집단이 일치하면 만족감이 높아진다.

NoteBase

13.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매월 5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갑은 식당을 창업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한다. 갑이 식당을 경영하면 월 매출액이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300만 원이고, 월 비용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매월 7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 기>

ㄱ. 갑이 식당을 창업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다.

ㄴ. 월 비용 700만 원은 식당 경영의 기회비용에 포함된다.

ㄷ. 월 매출액에 상관없이 식당 경영의 기회비용은 일정하다.

ㄹ. 월 매출액이 1,100만 원이라면 식당 경영이 직장 생활보다 이득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해 기회비용을 구하고, 식당 경영과 직장 생활의 이익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직장 월급 500만 원, 식당 월 매출액 1,000만~1,300만 원, 식당 월 비용 700만 원이다.
명시적 비용: 식당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지출하는 700만 원이다.
암묵적 비용: 식당 창업을 위해 포기하는 직장 월급 500만 원이다.
구해야 할 값: 식당 경영의 총기회비용과 매출액별 회계적 이윤·경제적 이윤이다.

사용할 공식

총기회비용=명시적 비용+암묵적 비용
회계적 이윤=총수입-명시적 비용
경제적 이윤=총수입-총기회비용
실제 지출액뿐 아니라 포기한 대안의 가치까지 고려해야 직장 생활과 식당 경영 중 어느 쪽이 경제적으로 유리한지 비교할 수 있으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식당 경영의 총기회비용은 700만 원+500만 원=1,200만 원이다.
2. 매출액이 1,000만~1,300만 원이면 회계적 이윤은 300만~600만 원이고, 경제적 이윤은 -200만~100만 원이다. 따라서 예상 매출의 전 범위에서 식당 창업이 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ㄱ은 X이다. 매출액이 1,200만 원보다 적으면 경제적 이윤이 음(-)이므로 식당 창업이 항상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매출액이 총기회비용 1,200만 원을 초과할 때 식당 경영이 직장 생활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4. ㄴ은 O이다. 실제 지출하는 월 비용 700만 원은 명시적 비용이며 식당 경영의 기회비용에 포함된다.
5. ㄷ은 O이다. 월 비용 700만 원과 포기한 월급 500만 원이 변하지 않으므로 매출액과 관계없이 총기회비용은 1,200만 원으로 일정하다.
6. ㄹ은 X이다. 매출액이 1,100만 원이면 회계적 이윤은 400만 원으로 직장 월급 500만 원보다 100만 원 적고, 경제적 이윤도 -100만 원이다. 올바르게는 이 경우 직장 생활이 식당 경영보다 100만 원 더 유리하다.

선지 판단

① X —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두 진술을 모두 옳다고 묶은 것이 잘못이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ㄷ이다.
② X — ㄱ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ㄱ, ㄷ의 조합은 잘못이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ㄷ이다.
③ O — ㄴ과 ㄷ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이다.
④ X —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ㄴ, ㄹ의 조합은 잘못이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ㄷ이다.
⑤ X —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ㄷ, ㄹ의 조합은 잘못이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ㄷ이다.

오답 포인트

월 비용 700만 원만 비용으로 보고 포기한 월급 500만 원을 누락하기 쉽다. 또한 매출액 1,100만 원에서 식당의 회계적 이윤 400만 원이 양수라는 이유만으로 창업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선택의 합리성은 회계적 이윤이 아니라 포기한 직장 월급까지 반영한 경제적 이윤으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택 문제에서는 먼저 실제 지출인 명시적 비용과 포기한 대안의 가치인 암묵적 비용을 더해 총기회비용을 구한다. 그다음 총수입에서 총기회비용을 빼 경제적 이윤을 계산하고, 경제적 이윤이 양수인지 여부로 선택의 경제적 유리함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기회비용=명시적 비용+암묵적 비용, 경제적 이윤=총수입-기회비용이다.

NoteBase

14.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2011년 9월 21일,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나) 2014년 12월 2일, 국군 부대의 해외 파견 연장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다) 2015년 11월 30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라) 2020년 4월 29일,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보 기>

ㄱ. (가)는 국회의 국가 기관 구성 권한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ㄴ. (나)는 국회의 국정 감시·통제 권한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ㄷ. (다)는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ㄹ. (라)는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국회의 권한이 국가 기관 구성, 국정 감시·통제, 입법, 재정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실제 사례와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가 기관 구성 권한은 주요 국가 기관의 구성에 국회가 관여하는 권한이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가 이에 해당한다.
국정 감시·통제 권한은 행정부의 활동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권한이다.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가 이에 해당한다.
입법에 관한 권한은 법률의 제정·개정과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 등에 관한 권한이다.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가 이에 해당한다.
재정에 관한 권한은 예산안·결산 등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가결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ㄱ과 ㄴ은 옳고, ㄷ과 ㄹ은 옳지 않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ㄱ은 대법원장 임명 동의를 통한 국가 기관 구성 권한이고, ㄴ은 국군 해외 파견 동의를 통한 국정 감시·통제 권한이므로 두 설명이 모두 옳다.
② X — ㄱ은 옳지만 ㄷ이 틀렸다.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는 재정에 관한 권한이 아니라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와 관련된 입법에 관한 권한이다. 따라서 'ㄱ, ㄷ'은 'ㄱ, ㄴ'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ㄴ은 옳지만 ㄷ이 틀렸다. (다)는 예산이나 결산을 다루는 사례가 아니라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동의하는 사례이다. 따라서 'ㄴ, ㄷ'은 'ㄱ, ㄴ'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ㄴ은 옳지만 ㄹ이 틀렸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가결은 입법에 관한 권한이 아니라 재정에 관한 권한이다. 따라서 'ㄴ, ㄹ'은 'ㄱ, ㄴ'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ㄷ과 ㄹ이 모두 틀렸다. (다)는 입법에 관한 권한, (라)는 재정에 관한 권한을 보여 주므로 'ㄷ, ㄹ'은 'ㄱ, ㄴ'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FTA에 '무역'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다)를 재정 권한으로 판단하거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된다는 이유로 (라)를 입법 권한으로 판단하기 쉽다. 권한의 분류는 사안의 명칭이 아니라 국회가 무엇에 동의하거나 무엇을 심의·확정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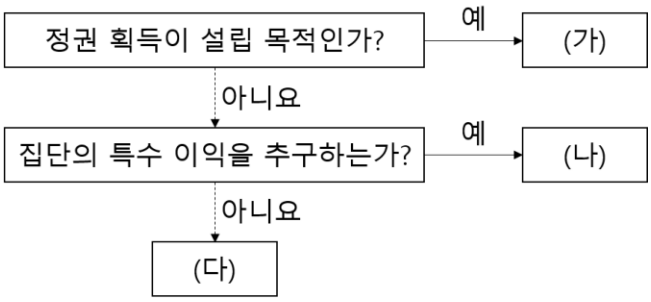
임명 동의는 국가 기관 구성, 행정부 활동에 대한 동의·견제는 국정 감시·통제, 법률과 조약은 입법, 예산과 결산은 재정으로 분류한다. 그 기준을 각 사례의 핵심 행위에 적용하면 ㄱ과 ㄴ만 옳다.

암기 포인트

임명은 구성, 해외 파견은 통제, 조약은 입법, 예산은 재정이다.

NoteBase

15. 정치 참여의 주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중 하나이다)



① (가)에는 법률에 규정된 공무원, 교사,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
② (나)의 대표적 예로 환경운동연합, 국경없는 의사회를 들 수 있다.
③ (다)는 정부와 정치인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한다.
④ (가)와 달리 (다)는 국민의 의사나 요구를 국정에 반영한다.
⑤ (다)와 달리 (나)는 구성원들의 공통의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면 정당,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집단의 특수 이익을 추구하면 이익 집단, 특수 이익보다 공익을 추구하면 시민 단체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가)는 정당, (나)는 이익 집단, (다)는 시민 단체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공무원, 교사,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는 표현이 틀리다. 정당의 당원은 원칙적으로 16세 이상의 국민이 될 수 있으므로 외국인은 가입할 수 없고, 법률이 제한하는 공무원과 교원도 가입할 수 없다. 올바르게는 '정당에는 16세 이상의 국민이 가입할 수 있으나, 법률이 제한하는 공무원과 교원 등은 가입할 수 없다'이다.

② X
환경운동연합과 국경없는의사회는 특정 집단의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의 대표적 예가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 단체의 예이다. '(나)의 대표적 예'가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다)의 대표적 예로 환경운동연합, 국경없는의사회 등을 들 수 있다'이다.

③ O
(다)는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 단체이다. 시민 단체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정부와 정치인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④ X
'(가)와 달리'가 틀리다. 시민 단체뿐 아니라 정당도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모아 국정에 반영한다. 올바르게는 '(가)와 (다)는 모두 국민의 의사나 요구를 국정에 반영한다'이다.

⑤ X
'(다)와 달리'와 '구성원들의 공통의 인식을 공유한다'는 구분이 틀리다. 시민 단체도 공통의 가치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올바르게는 '(나)는 구성원들의 특수 이익을 추구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다)는 공익을 추구하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이다.

오답 포인트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가 모두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통점 때문에 혼동하기 쉽다. 구별의 핵심은 '정치권력 획득'과 '특수 이익 추구'이다. 특히 ④와 ⑤의 '~와 달리'는 실제로 두 집단 모두에 해당하는 공통 기능을 차이점처럼 제시한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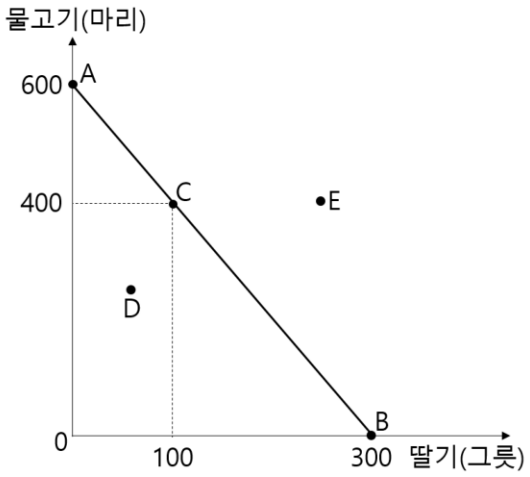
먼저 정치권력 획득이 목적이면 정당으로 판단한다. 정치권력 획득이 목적이 아니라면 특정 구성원의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는 이익 집단, 사회 전체의 공익을 추구하는 경우는 시민 단체로 판단한다. 선지의 '~와 달리' 뒤에 나온 기능이 두 집단의 공통점인지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정당은 권력 획득, 이익 집단은 특수 이익, 시민 단체는 공익 추구가 핵심이다.

NoteBase

16. 선분 $\overline{AB}$는 무인도에서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 한 달 동안 최대 생산할 수 있는 물고기와 딸기의 조합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두 재화 간의 기회비용이 일정하다.
② 점 C는 점 A보다 효율적인 생산량이다.
③ 점 D는 점 B보다 비효율적인 생산량이다.
④ 점 E는 갑이 생산할 수 없는 생산량이다.
⑤ 물고기 한 마리의 기회비용은 딸기 0.5 그릇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생산가능곡선에서 기회비용, 효율적·비효율적 생산량, 생산 불가능한 생산량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가로축은 딸기 생산량, 세로축은 물고기 생산량임을 확인한다.
2. 선분 AB 위의 점은 효율적, 안쪽의 점은 비효율적, 바깥쪽의 점은 현재 자원과 기술로 생산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3. A에서 B로 갈 때 딸기 300그릇이 늘어나는 대신 물고기 600마리가 줄어드는 관계로 기회비용을 계산한다.

핵심 근거

선분 AB는 직선이므로 두 재화 간 기회비용이 일정하다. A와 C는 모두 선분 AB 위에 있어 효율적이고, D는 선분 안쪽이라 비효율적이며, E는 선분 바깥쪽이라 생산할 수 없다. 또한 딸기 300그릇의 기회비용이 물고기 600마리이므로 물고기 한 마리의 기회비용은 딸기 0.5그릇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선분 AB가 직선이므로 딸기 생산을 1그릇 늘릴 때마다 포기하는 물고기 수가 일정하다. 따라서 두 재화 간 기회비용이 일정하다.
② X — A와 C는 모두 생산가능곡선인 선분 AB 위의 점이므로 두 생산량 모두 효율적이다. '점 C는 점 A보다 효율적이다'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점 A와 점 C는 모두 효율적인 생산량이다'이다.
③ O — D는 생산가능곡선 안쪽에 있어 자원의 일부가 유휴 상태인 비효율적 생산량이고, B는 생산가능곡선 위에 있어 효율적 생산량이다. 따라서 D는 B보다 비효율적이다.
④ O — E는 생산가능곡선 바깥쪽에 있으므로 현재 보유한 자원과 기술로는 물고기 400마리와 해당 딸기 수량을 함께 생산할 수 없다.
⑤ O — A에서 B로 이동하면 물고기 600마리를 포기하고 딸기 300그릇을 얻는다. 따라서 물고기 한 마리의 기회비용은 딸기 300/600 = 0.5그릇이다.

오답 포인트

생산가능곡선 위에서 어느 점이 다른 점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함정이다. A와 C는 생산 조합만 다를 뿐 모두 주어진 자원을 빠짐없이 사용한 효율적 생산량이다. 또한 ⑤에서는 딸기 한 그릇의 기회비용과 물고기 한 마리의 기회비용을 반대로 계산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산가능곡선 위는 효율적, 안쪽은 비효율적, 바깥쪽은 생산 불가능으로 판단한다. 한 재화의 기회비용은 그 재화 한 단위를 더 얻기 위해 포기하는 다른 재화의 양으로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생산가능곡선은 위·안·밖을 각각 효율·비효율·불가능으로 구분하고, 직선이면 기회비용이 일정하다.

NoteBase

17. 다음에 나타난 문화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한국인은 고개 숙여 인사하고, 프랑스인은 볼에 뽀뽀하는 식으로 인사한다. 태국인은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한다.

①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습득된다.
②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다.
③ 전승 과정에서 새로운 요소가 더해져 풍부해진다.
④ 한 사회 구성원이 공통으로 가지는 생활 양식이다.
⑤ 여러 구성 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한국·프랑스·태국에서 각 사회의 구성원이 공통된 방식으로 인사하는 사례를 통해 문화의 공유성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문화의 공유성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의 생활 양식과 의미 체계를 함께 가지는 속성이다.
학습성은 문화를 후천적으로 배우는 속성, 변동성은 문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속성, 축적성은 전승 과정에서 새로운 요소가 더해지는 속성, 전체성은 문화의 여러 요소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속성이다.
이 사례에서는 나라마다 인사 방식이 다르다는 점보다 각 사회의 구성원이 자기 사회의 인사 방식을 공통으로 따른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후천적으로 습득된다'는 문화의 학습성에 대한 설명이므로 제시된 사례의 핵심 속성과 다르다. 이 사례에 맞게 고치면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된 인사 방식을 가진다'이다.
② X —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다'는 문화의 변동성에 대한 설명이지만, 사례에는 시간에 따른 인사 방식의 변화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 사례에 맞게 고치면 '같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된 인사 방식을 따른다'이다.
③ X — '전승 과정에서 새로운 요소가 더해져 풍부해진다'는 문화의 축적성에 대한 설명이지만, 사례에는 세대 간 전승이나 새로운 요소의 추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사례에 맞게 고치면 '각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된 인사 방식을 공유한다'이다.
④ O — 문화의 공유성에 대한 설명이다. 한국인은 고개 숙여 인사하고 프랑스인은 볼을 맞대며 태국인은 두 손을 모아 인사하는 것처럼,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통된 생활 양식인 인사 문화를 가진다.
⑤ X — '여러 구성 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문화의 전체성에 대한 설명이지만, 사례에는 문화 요소 사이의 상호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 사례에 맞게 고치면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된 인사 방식을 가진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②·③·⑤도 모두 문화의 일반적 속성을 올바르게 설명하므로 문장 자체의 참·거짓만 판단하면 틀리기 쉽다. 제시 사례에 직접 나타난 속성을 골라야 하며, 여기서는 나라별 차이보다 각 사회 내부에서 인사 방식이 공통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따른다'가 강조되면 공유성, '배워서 익힌다'면 학습성,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면 변동성, '전승되며 더해진다'면 축적성, '문화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준다'면 전체성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함께 가지면 공유성, 배워 익히면 학습성, 달라지면 변동성, 더해지면 축적성, 서로 연결되면 전체성이다.

NoteBase

18. 재산 소득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상여금	ㄴ. 경조금
ㄷ. 주식 배당금	ㄹ. 예·적금 이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득을 얻은 원천에 따라 근로 소득, 재산 소득, 비경상 소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재산 소득은 보유한 금융 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는 소득이다. 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이 대표적이다.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근로 소득이고, 경조금은 자산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얻는 비경상 소득이다.
따라서 ㄷ 주식 배당금과 ㄹ 예·적금 이자가 재산 소득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근로 소득이고, ㄴ 경조금은 일시적으로 얻는 비경상 소득이다. ‘ㄱ, ㄴ’이 아니라 ‘ㄷ, ㄹ’이 재산 소득에 해당한다.
② X — ㄷ 주식 배당금은 재산 소득이지만, ㄱ 상여금은 근로 소득이다. ‘ㄱ, ㄷ’이 아니라 ‘ㄷ, ㄹ’이 옳다.
③ X — ㄷ 주식 배당금은 재산 소득이지만, ㄴ 경조금은 비경상 소득이다. ‘ㄴ, ㄷ’이 아니라 ‘ㄷ, ㄹ’이 옳다.
④ X — ㄹ 예·적금 이자는 재산 소득이지만, ㄴ 경조금은 비경상 소득이다. ‘ㄴ, ㄹ’이 아니라 ‘ㄷ, ㄹ’이 옳다.
⑤ O — ㄷ 주식 배당금은 주식 보유로 얻는 수익이고, ㄹ 예·적금 이자는 금융 기관에 맡긴 자금에서 얻는 수익이므로 둘 다 재산 소득이다.

오답 포인트

상여금과 경조금도 돈으로 들어오는 소득이라는 점만 보고 재산 소득으로 고르기 쉽다. 재산 소득인지 판단할 때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금융 자산이나 부동산을 제공한 대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득의 명칭보다 발생 원천을 확인한다. 노동의 대가이면 근로 소득, 자산을 제공한 대가이면 재산 소득,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얻으면 비경상 소득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이자·배당·임대료는 재산 소득, 상여금은 근로 소득, 경조금은 비경상 소득이다.

NoteBase

19.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가), (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저개발 국가들이 선진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을 구비하는 과정을 바람직한 사회 발전으로 간주하는 이론이다. 제3세계 국가들이 선진 국가의 특징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일반적인 사회 변동의 방향으로 본다.

(나) 제3세계 국가들의 저발전의 원인을 국제 사회의 힘의 불균형 관계로 설명한다. 20세기 후반의 신생 국가들이 선진 국가들의 발전 과정과는 다른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들은 빈곤의 악순환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본다.

<보 기>

ㄱ. (가)는 사회 발전을 서구화와 동일시하는 진화론적 사고를 전제한다.

ㄴ. (나)는 세계가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뉘어 있다고 본다.

ㄷ. (나)는 저발전의 원인을 중심부와 주변부의 단절로 본다.

ㄹ. (가)와 (나)는 모두 능력주의로의 전환을 사회 변동의 핵심 요건으로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근대화론과 종속 이론이 사회 발전의 방향과 제3세계 저발전의 원인을 어떻게 다르게 설명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 근대화론: 모든 사회가 전통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일정한 발전 단계를 거쳐 나아가며, 저개발 국가는 선진국의 발전 경로와 특성을 따름으로써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진화론적·서구 중심적·단선적 발전관이 핵심이다.

(나) 종속 이론: 제3세계의 저발전을 그 사회 내부의 낙후성보다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의 불평등한 국제 관계와 종속 구조의 결과로 보는 이론이다. 중심부-주변부 구조, 불평등 교환, 빈곤의 악순환이 핵심이다.

핵심 대비: 근대화론은 선진국을 발전의 본보기로 보지만, 종속 이론은 선진국 중심의 국제 구조가 주변부의 저발전을 재생산한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ㄱ과 ㄴ은 모두 옳고, ㄷ과 ㄹ은 옳지 않으므로 옳은 것만 고른 조합이다.
② X — ㄱ은 옳지만 ㄷ의 '중심부와 주변부의 단절'이 틀렸다. 종속 이론은 저발전의 원인을 중심부와 주변부의 단절이 아니라 불평등한 연결과 종속 관계에서 찾는다. 따라서 ㄷ 대신 ㄴ을 골라야 한다.
③ X — ㄴ은 옳지만 ㄷ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중심부와 주변부가 단절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주변부가 중심부에 종속된 불평등한 관계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저발전이 지속된다고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ㄷ 대신 ㄱ을 골라야 한다.
④ X — ㄴ은 옳지만 ㄹ의 '(가)와 (나)는 모두 능력주의로의 전환을 핵심 요건으로 본다'가 틀렸다. 근대화론은 귀속적 지위에서 성취 지위로의 전환을 근대화의 특징으로 볼 수 있지만, 종속 이론은 능력주의가 아니라 중심부-주변부의 불평등한 종속 구조를 핵심으로 본다. 따라서 ㄹ 대신 ㄱ을 골라야 한다.
⑤ X — ㄷ과 ㄹ이 모두 틀렸다. ㄷ은 '단절'이 아니라 '불평등한 연결과 종속'으로, ㄹ은 '두 이론 모두 능력주의를 핵심으로 본다'가 아니라 '근대화론은 성취 지위의 확산을 중시할 수 있으나 종속 이론은 국제적 종속 구조를 중시한다'로 고쳐야 한다. 옳은 보기의 조합은 ㄱ과 ㄴ이다.

오답 포인트

ㄷ의 '단절'이 함정이다. 종속 이론은 중심부와 주변부가 아무 관계가 없어서 주변부가 가난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으나 그 관계가 불평등하고 종속적이어서 주변부의 저발전이 지속된다고 본다. 또한 ㄹ은 근대화론의 특징을 종속 이론에도 공통으로 적용한 점이 틀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진국의 발전 경로를 따라 수렴한다'는 설명은 근대화론, '중심부-주변부의 불평등한 국제 관계가 저발전을 만든다'는 설명은 종속 이론으로 판단한다. 종속 이론에서 중심부와 주변부의 관계는 단절이 아니라 종속적 연결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근대화론은 선진국 경로로의 수렴, 종속 이론은 중심부에 대한 주변부의 종속이다.

NoteBase

20. 근대 민법 3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자신의 행위에 따른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나) 계약이나 법률 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다.
(다)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국가나 타인이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① 근대 민법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 자유주의, 합리주의 사상에 기반하고 있다.
②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약자의 보호를 위해 이 원칙에 예외를 두어 적용한다.
③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도 환경 오염의 원인 제공자에게는 (가)의 원칙을 수정하여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현대 민법에서 (나)의 원칙은 공공의 이익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⑤ (다)의 원칙은 자유주의에 기초한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인 과실 책임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과 현대 민법에서의 수정 내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 과실 책임의 원칙: 고의나 과실이 있는 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현대에는 환경 오염과 같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기도 한다.
(나) 사적 자치의 원칙: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 등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원칙이다. 현대에는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그 자유가 제한된다.
(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자유롭고 배타적으로 지배한다는 원칙이다. 현대에는 소유권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은 개인을 자유롭고 합리적인 권리 주체로 보는 개인주의·자유주의·합리주의에 바탕을 둔다.
② O —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 세 원칙에 예외와 제한을 둔다.
③ O — 환경 오염은 피해자가 원인 제공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책임을 지게 하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과실 책임 원칙의 수정으로 적용될 수 있다.
④ O — 사적 자치에 따른 자유도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사회 질서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받는다.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현대적으로 수정된 내용이다.
⑤ X — 틀린 부분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사유 재산권은 보장되지만 소유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으며, 절대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⑤는 사유 재산권의 보장과 소유권의 절대성을 같은 의미로 보게 만드는 선지이다. 현대 민법도 사유 재산권을 보장하지만, 그 권리의 행사에는 공공복리에 따른 제한이 있으므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근대의 세 원칙을 '과실이 있어야 책임, 의사에 따라 계약,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정리한 뒤, 현대의 수정 방향을 각각 '무과실 책임, 계약 자유의 제한, 소유권의 공공복리상 제한'과 대응시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근대는 과실·자치·소유권 절대, 현대는 무과실 책임·자치 제한·소유권의 공공성이다.

NoteBase